

“국민연금 뿐 아니라 건강보험도 빨간불”

유성엽 의원 “당장 올해부터 적자 전환” ‘문재인 케어’ 적용으로 보험재정 악화되어 기재부는 3년 전 자료로만 대응 ‘구멍’

국민연금 뿐 아니라 건강보험도 재정관리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기재부의 단일한 재정관리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유성엽(민주평화당, 기획재정부위원회) 의원은 “국민연금 뿐 아니라 건강보험도 당초 예상되었던 2022년부터 4년이나 앞당겨진 올해부터 당장 적자가 시작된다”고 밝힌 후, “상황이 심각한데도 기재부는 3년 전 자

료를 근거로 국가재정에 문제가 없다고만 한다”고 기재부의 단일한 재정 인식을 비판했다. 2015년 기재부가 실시한 ‘2016~2060년 장기재정전망’ 결과에 의하면, 건강보험의 경우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에 따라 2022년에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2025년경에 누적수지가 고갈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이는 보험요율을 법상 상한인 8%까지 인상한다는 전제에, 국고 지원 비율 역시 현행 부담금 예상수입의 3%대(담배부담금 예상수입의 65%) 지원수준을 두 배에 가까운 6%로 가정하여 추계한 것으로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예측이라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기재부의 전망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2017~2022년까지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인 30.6조원이 투입되는 상황과 인구 노령화로 인한 노인 의료비 증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어서 더욱 문제가 크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작년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당초 기재부가 예측한 2022년이 아닌 당장 올해

부터 건강보험이 적자로 전환되며, 누적수지 고갈 시점 역시 훨씬 앞당겨질 것이라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노인 의료비 증가와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구체적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아무런 대책없이 그저 나몰라라 하고 있다”며,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장기재정전망’ 조차 부처 임의대로 몇 년째 시행하지 않는 것은, 국가재정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기재부의 직무태만이자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진성 기자



문 대통령, 국가기록특별전 관람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및 정부수립 70주년 경축식을 마친 후 국가기록특별전을 관람하고 있다.

이용호 의원, 예산확보 노력 결실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등 3가지 사업 선정 성과

제20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된 시점,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의 지역 공모사업 선정 및 예산 확보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이 의원은 15일 임실군 주민 생활편의 및 안전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가지 사업이 확정되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최근 임실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이 환경부 현지 실사 등을 거쳐 확정됐다. 내년부터 5년 간 총사업비 308

억원(국비 60%, 도비 10%, 군비 30%)을 들여 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임실 내 20년 이상 된 노후상수도는 전체의 약 20%에 달한다. 내년엔 투입될 국비는 5억원으로 예상되며, 2023년까지 관내 10개 배수지와 2개 정수장 등에서 상수관망 정비,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이 이뤄질 예정이다. 임실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환경부·산림청 등이 주관하는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선정됐다. 내년부터 4년 간 총사업비 300억원(국비 150억, 지방비 150억)을 들여 정비사업이 실시될 계획이다. 임실읍 일원은 군청과 공용버스터미널, 기차역 등이 소재해있는데도 하천과 산지 정비가 미흡해 풍수해 위험을 지적받아 왔다. 사업 추진으로 배수로, 급경사지, 사방댐, 교량, 빗물펌프장 등 각종 시설이 개선돼 주민 안전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걱정 없이 농사지어 희망을 파는 행복한 로컬푸드 공동체’ 구축사업으로 총사업비 20억원 중 국비 8억 5천 만원이 확보됐다. /김진성 기자

정동영, 익산 피해능가 방문

민주평화당 정동영(사진) 대표가 16일 오후 익산을 방문한다. 정동영 대표는 폭염에 따른 한해피해 능가 현장 방문차 이날 오후 2시 40분 익산시청에 도착, 익산시장실에 정환을 시장과 잠시 환담을 나눈 뒤 곧바로 현장 방문에 들어가 폭염피해 지역인 삼기면 고구마 재배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익산=우병희 기자



도의회 의정역량강화 열기

전라북도의회 의원들이 지난 14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한 ‘지방의회 아카데미’에 참여해 의정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도의원 26명은 예산·결산 심사와 자치입법,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뿐만 아니라 리더의 품격과 자치분권시대 지방의회의 역할 방안 등도 모색했다. 송성환 의장은 축사를 통해 “6.13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의정실무 역량과 공직가치, 자기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매우 높다”며 “지방에 생기를 불어 넣고 전 국민의 삶의 질을 균등하게 향상시키는 좋은 지방자치의 미래를 우리가 앞장서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의장단-상임위 뭉친 예외? 국회 특활비 ‘꼼수 폐지’ 논란

특활비 폐지 합의했지만 뒤통에 “교섭단체 뭉친” 바른미래당 등 반발

여야가 ‘썬지폰’ 비판을 받은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지만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활비 전면 폐지가 아니라 교섭단체 뭉친 특활비는 폐지하되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특활비는 절반 정도 삭감해 양성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꼼수 폐지’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지난 13일 문화상 국회의장 주제로 회동을 갖고 국회 특활비 폐지에 합의했다. 일찌감치 특활비 폐지를 당원으로 채택한 바른미래당과 달리 영수증 처리를 통한 양성화로 사실상 특활비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민주당과 한국당에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양당이 ‘폐지’로 입장을 선화한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특활비 완전 폐지에 합의를 이뤄냈다”며 “앞으로 어떤 경우든 특활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특활비 폐지에 따른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국회의장에게 일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몇 시간 뒤 민주당은 별도 공지를 통해 ‘금일 특활비 폐지는 교섭단체 특활비 폐지이며 의장단, 상임위에서 각각 사용하는 특활비는 의장께서 논의를 주도에 16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활비 전면 폐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올해 국회 특활비 예산은 총 62억원으로 이 중 교섭단체 뭉친 15억원, 나머지는 의장단과 상임위 몫이다. 국회는 의장단과 상임위 특활비의 경우 완전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회동에서 여야의 특활비 폐지 결정에 “의정사에 남을 쾌거”라며 환영한 문 의장이 의장단과 상임위 뭉친 ‘예외’로 둔 셈이다. /뉴스

국회 관계자는 뉴스와 통화에서 “의장단은 기밀을 요하는 비용이 있고, 상임위는 업무추진비가 많지 않다”며 “(폐지 대신) 의장단과 상임위 특활비를 절반 정도로 줄이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투명하게 사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등 소수 야당은 반발하고 나섰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은 꼼수 특활비 폐지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특활비 전면 폐지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회동 당시 의장단과 상임위 특활비를 존치하겠다는 얘기는 전혀 들은 바 없다”며 “(국회가) 국민 앞에 대단히 부끄러운 상황이 돼버렸다. 바른미래당은 국민과 함께 특활비가 전면 폐지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활비 폐지를 끊임없이 주장해 온 정의당도 특활비 반쪽 폐지에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며 비판했다.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의원총회에서 “국회 특활비가 비판받는 것은 그 사용처를 모르는 국민 세금이 썬지폰처럼 집행됐기 때문”이라며 “그런 점에서 의장단과 상임위 특활비 역시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의장단과 상임위 특활비 문제에 대해 국회로 공을 돌리는 분위기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교섭단체로서 할 수 있는 건 했고, 국회에서 발표할 사안은 의장이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또 “운영위 특활비를 비롯한 일체 특활비는 7월부터 받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한국당은 특활비 제도에 대해 완전 폐지가 좋겠다는 입장을 어제 명확히 했다”며 “앞으로 국회의장께서 특활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문 의장은 오는 16일 특활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뉴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